



주간 통일정세

2010-3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 당 대표자회 참가자 선출 진행중(7/26, 자유북한방송)

- 북한이 오는 9월 초순으로 예정된 노동당 대표자회를 앞두고 회의 참가자를 선출하고 있음.
- 방송은 ‘함경북도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당대표자회 참가자들을 선출하는 사업이 당 기관에서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며 “당 내부 사업으로 진행되는 당 대표자회 참가자 선출 원칙이 중앙당으로부터 하달됐다”고 밝힘.
- 이번 당대표자회 참가자는 당 하부의 말단조직인 당 세포비서를 비롯한 핵심당원을 위주로 선출하되 당 간부들은 적은 인원만 참가한다는 원칙이 시달됨.
-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규약은 “당대회 또는 당대표회의 대표자는 차하급 당조직의 당대표회 또는 당총회에서 선거한다”며 “당대회 대표자의 선출 비율은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며, 도·시·군 당조직의 당대표회 대표자 선출 비율은 당 중앙위원회가 작성한 규정에 따라 해당 당 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함경북도 통신원은 또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당의 위대성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당원들 사이에서도 당 생활을 회피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면서 “당 생활총화에 참가하기 싫어 서면으로 생활보고를 하는 당원이 생겨나고,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당비까지 제대로 내지 않아 당 간부들이 당 회의 때마다 큰소리를 친다”고 전함.
- 통신원은 이어 “당원이 당 활동에 6개월 이상 참가하지 않으면 자동 출당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임.

● 北, 김일성-김정일 동격화 징후(7/27, 열린북한방송)

-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수령’인 고 김일성 주석과 동격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남.
- 방송이 공개한 북한 군 기관지 ‘조선인민군’(4월14일자)은 2면 기사에서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김일성-김정일 강성대국을 일떠세울 백두산 혁명강군의 드팀없는 신념”이라는 대목에서 ‘강성대국’ 앞에 김일성 주석과 김 위원장 이름을 나란히 인용하였으며, 이어 “보고자들은…위대한 당의 선군혁명 영도 따라…김정일 강성대국을 하루 빨리 일떠세우기 위해…싸워나갈 데 대해 강조했다”면서 ‘김정일 강



성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

- 신문 사설은 또 “백두의 선군영장을 충직하게 받들어…김정일 통일 강국을 일떠세우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자”면서 ‘김정일 통일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
- 북한 매체들은 1994년 7월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민족이나 조국 앞에 써 ‘김일성 민족’, ‘김일성 조선’ 식으로 표현해왔으나, ‘조선인민군’처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이름을 나란히 붙여 쓰거나 김 위원장의 이름을 단독으로 쓴 예는 외부에 처음 전해짐.
- 방송은 “후계자 김정은이 조부 김일성과 같은 반열에 아버지 김정일을 올려놓고 역사적 인물로 미화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으로 과시하고 입지를 굳히려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

● 北김정일, ‘정전’ 경축음악회 관람(7/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국해방전쟁 승리’(6.25전쟁 정전) 57주년을 기념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음악회를 관람하였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이번 ‘공개활동’ 보도는 지난 24일 조선중앙통신이 평양 교예단 공연 관람 소식을 전한 이후 나흘만에 나온 것
- 김 위원장은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승리의 열병식’ 등의 공연이 끝난 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조국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 번 구원한 민족사적 사변이었다”면서 “그 어떤 힘도 자주독립 사회주의로 나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현실로 확증한 자랑찬 승리였다”고 말했다고 소개
- 이번 공연 관람에는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최태복·김국태·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와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공연(20일 보도), 평양교예단 종합교예 공연(24일 보도)에 이어 이번까지 세 차례 공연을 봤음.

● 北…김정일→김정은 ‘해외비자금 이관’ 진행중(7/28, 열린북한방송)

- 미화 4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은닉 비자금을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작업이 리철 전 스위스대사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음.
- 방송은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인용, “리철 전 스위스대사가 지난 3월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는 김정은의 해외 은닉 비자금을 김정은에게 점진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귀국 후 리철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아 김정은에게 해외비자금 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이관 작업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또 “북한에서 김정은 후계구도의 공개적 후견인이 장성택(김



위원장의 매제)이라면 리철은 숨은 후견인”이라면서 “리철이 김정은 후계를 막후에서 조종한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함.

- 방송은 이어 “리철의 본명은 림철인데 김정일을 따라 입당하고 나서 1980년 제네바로 파견될 때 리철로 바뀐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 공립학교에 다닐 때 학부형 역할을 맡을 정도로 리철은 김정은과 가족같이 각별한 사이”라고 덧붙임.
- 1980년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공사로 부임해 제네바와 첫 인연을 맺은 리철은 그 후 UN사무국 주재 상임대표부 대사를 거쳐 1998년부터 스위스 대사를 겸임했으며, 지난 3월 귀국 전까지 스위스 외교가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스위스, 룩셈부르크 등의 은행 비밀계좌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짐.

● 北김정일, 당간부들에 고급승용차 160여대 선물(7/3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1874호가 사치품의 북한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당 고위간부들에게 ‘벤츠’로 추정되는 고급승용차 160여대를 나눠준 것으로 전해짐.
- 방송은 ‘북한과 무역사업을 하는 중국인 사업가’의 전언을 인용,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 전 도(道)당 고위간부들에게 고급승용차를 선물로 나눠줬다”며 “김 위원장이 보내준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다”고 밝힘.
- 사업가는 또 “김정일로부터 이미 승용차를 받은 도당 책임비서나 조직비서, 선전비서 등은 이번에 제외되고 아직 승용차가 없는 근로단체 비서와 도당 부장급이 대상이었다”면서 “함북도당에만 11대의 승용차가 선물로 내려왔다”고 설명
- 또 ‘헤산시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7월23일 헤산시 경기장에서 김정일이 선물한 승용차를 전달하는 전달식이 열렸다”면서 “선물로 내려온 승용차는 독일 벤츠(다임러사)와 중국 자동차회사의 합영회사 제품인 것으로 소문났는데 승용차 뒷면에는 ‘MBC’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다”고 소개
-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이번에 나눠준 승용차가 160여대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들 승용차의 반입 경로와 시점, 전체 가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독일 다임러사는 중국의 ‘베이징자동차’와 합작해 중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선물로 나눠준 승용차도 중국산 벤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北김영남 ‘홍루몽, 북-중 우의의 상징’(7/30, 신화통신)

- 통신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개월여의 중국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홍루몽’에 대해 “북-



중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공헌을 했다”며 극찬했다고 보도

- 피바다가극단이 지난 29일 평양대극장에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외교관들과 평양 관객들을 위해 홍루몽을 공연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이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대사에게 “홍루몽의 중국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고 중국인들로부터 찬사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이번 공연은 북·중간의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양국의 우의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홍루몽은 북·중 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
- 류 대사는 이에 대해 “홍루몽이 북한 예술의 정수를 선보였을 뿐 아니라 양국간 두터운 우의를 다지게 했다”며 “홍루몽에 이어 북한에서 준비 중인 가극 ‘양산박과 축영대’도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화답

● 北김정일, 자강도 일대 공장 현지지도(7/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의 강계트락토르(트랙터)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9월방직공장, 장자산종합식료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강계고려약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전함.
- 강계트락토르종합공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소방대의 ‘소화훈련’을 참관했으며, 장자강공작기계공장에서는 “최첨단 기술에 기초한 기술개조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생산공정의 현대화, 정밀화,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김 위원장은 또 신설된 장자산종합식료공장을 방문해 생산공정을 둘러본 뒤 강계기초식품공장에 들러 “식품 부문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기술지표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생산공정의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 제약공장인 강계고려약가공공장에서는 “고려약(한약)의 치료 효과를 높이려면 결정적으로 고려약 생산을 과학화, 공업화해 약을 엑스화(엑기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은 전함.
- 앞서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예술소조와 평양방직공장 기동예술선동대 공연(20일 보도), 평양교예단 종합교예공연(24일 보도), ‘조국해방전쟁 승리’(6.25전쟁 정전) 기념 공훈국가합창단 경축음악회(28일 보도) 관람 소식을 전했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현지지도에서는 관련 사진을 공개함.
-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당 중앙위 부장인 김경희, 홍석형, 태중수와 제1부부장인 주규창, 리재일이 수행



■ 김정일동향

- 7/28 김정일, '조국해방전쟁 승리'(6.25전쟁 정전) 57주년을 기념하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경축음악회 관람(7/28, 조선중앙방송)
 - 최영림 내각 총리, 김영춘 국방위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최태복·김국태·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주상성 인민보안부장 등이 수행
- 7/28 김정일, 자강도의 강계뜨락뜨르(트랙터)종합공장, 장자강공장 기계공장, 9월방직공장을 현지지도
 - 박도춘 자강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 당 중앙위 부장인 김경희, 홍석형, 태종수와 제1부 부장인 주규창, 리재일이 수행

■ 기타 (대내 정치)

- 《전승절》(7/27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돌 관련 김일성의 "비범한 영군술에 의한 자랑찬 승리"라며 김정일의 선군영도 '당위성, 정당성' 강조(7/26, 중통·노동신문)
- 《전승절》(7/27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김영춘(인민무력부장, 보고), 김기남(사회) 등 참가하 평양체육관에서 진행(7/26, 중·평방)
 - 주석단 : 김영남, 최영림, 전병호, 최태복, 이영호, 김정각, 김국태, 김기남, 양형섭, 김영대 등
- 訪北 한상렬 목사,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등 답사(7/27, 중통)
- 《남녀평등권법령》 공포(7/30) 64돌 관련 '천리마 동상'에 여성상이 새겨진데 대해 전하며 金父子의 "여성의 자유와 해방, 정치와 군사 등 각 분야 참여보장 등 배려" 칭송 및 "조선여성의 긍지높은 삶" 선전(7/29, 중방·노동신문·중통)
- '평양산원' 개원(1980/7/30) 30돌 즈음 지난 30년간 "600여쌍의 세쌍둥이를 길러냈다"고 성과 자랑 및 "김정일의 100여차에 걸친 의료기구 등 전달, 무상치료제 실시 등 사회주의 제도" 선전(7/29, 중방·중통)
- 北,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생산공장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일꾼들과 기술자들에게 표창수여(7/29, 중통)

나. 경제

● 北 금융제재로 수출대금 동결 '전전공공'(7/26, 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드는 돈을 죄기 위한 대북 추가 금융제재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광산 업체들이 이미 지난해 핵실험 이후 취해진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로 수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짐.

- 25일 중국의 광산업계와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의 대표적인 광물인 마그네사이트 생산업체인 '조선마그네샤크링카공업총회사'가 대북 금융제재 이후 수출대금의 송금중계를 맡겼다는 외국계 은행이 없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460만 달러(55억 원) 규모의 아연과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중국 광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제적인 대북 금융제재가 강화되면서 유럽계 은행은 물론 중국의 은행들조차 북한 무역업체들의 수출대금 송금중계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유럽의 수입 업체들이 이미 아연과 대금을 지급했으나 송금받을 길이 막혀 북한이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힘.
- 관계자는 “북한의 다른 광물 수출업체들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광물 이외에는 외화벌이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북한이 외국계 은행들의 송금 중단 조치로 광물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외화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 北 ‘평양 10만호’ 사업, 자재난으로 큰 차질(7/28, 데일리NK)

-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전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평양 10만호’ 사업이 시멘트 등 자재 부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매체는 ‘평양 소식통’을 인용,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하는 3만5천세대만 해도 현재 공정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기본 골조공사를 9월까지 마치고 미장과 내부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시멘트 부족으로 아직 외형도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힘.
- 매체는 이어 “‘평양 10만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장성택 당 행정부장이 ‘석탄이라도 팔아서 시멘트를 조달하라’고 긴급 지시해 외화벌이 기관들에 총동원령이 떨어졌다”고 말함.
- 북한의 ‘평양 10만호’ 사업은 2012년까지 평양 지역에 주택 10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인데, 그 중 평양 중심부 1만5천세대와 북쪽 룡성구역부터 남쪽 력포구역에 이르는 철도연선의 2만세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은 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전국의 공장과 기업소에 총동원령을 내렸으나 희천발전소 등 대형 건설사업과 겹치면서 지난 6월부터 시멘트 등 자재난이 심해졌음.
- 사업 추진 조직으로 설립된 ‘평건투자개발그룹’의 투자의향서를 보면 ‘3월에 진행되는 기초공사에만 30만톤의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북한의 연간 시멘트 생산량은 남한의 12%인 640만톤에 불과하다고 덧붙임.
- 매체는 “원래 이 사업은 2012년을 목표로 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과시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현재는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되고 있다”면서 “만약 공사에 차질이 생겨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지거나 하면 김정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고 지적



● 北, 무산 철광석 중국에 팔아 옥수수 대량수입(7/29, NK지식인연대)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무산광산 철광석의 중국 수출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옥수수를 대량 수입하고 있음.
- 단체는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무산세관을 통과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광석의 양이 7월 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면서 “20일 전만 해도 무산세관을 통과하는 25t 트럭이 하루 평균 50~60대였는데 요즘은 100대 이상으로 늘어 하루 철광석 수출량도 1천200여에서 2천500t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힘.
- 통신원은 또 “철광석을 운반하러 들어오는 중국 트럭에 옥수수 포대가 가득 실려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면서 “북한이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한 대금으로 옥수수를 사들이는 것 같다”고 말함.
- 이처럼 옥수수 수입이 단기 급증하면서 이달 중순 kg당 1천200원까지 치솟았던 무산시장의 쌀값이 900원대로 떨어졌고, 옥수수 값도 kg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했다고 덧붙임.
- 한편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외화사정 악화로 북한 외화벌이 기관에 지급되던 수입대금용 달러가 끊겨 식량 수입이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의 장마당 쌀값이 kg당 1천200원대까지 폭등했다고 설명

● 北, 화폐개혁시 예금 50만원 8월부터 교환(7/29,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작년 11월 말 화폐개혁 당시 조선중앙은행에 예금된 주민들의 돈을 구권 50만원 한도 내에서 8월 1일부터 100대 1로 환산해 신권으로 바꿔준다고 공고
-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구권 50만원은 현재 사용 중인 신권 5천원에 불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북한의 이번 조치가 화폐개혁 이후 개인보유 자산이 줄어들면서 주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해 생활고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분석
- 매체는 화폐개혁 직전 북한 시장에서 쌀이 1kg당 2천원 안팎에 팔렸기 때문에 당시 50만원이 있으면 쌀 250kg을 살 수 있었다면서, 소식통의 언급을 통해 “이미 모든 물가가 화폐개혁 이전으로 돌아와 쌀 1kg에 1천원이고, 50만원을 저금했다가 5천원을 돌려받으면 이제 쌀 5kg밖에 사지 못한다”고 북한 사정을 전함.
- 매체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신·구화폐의 교환비율을 1:100으로 했던 지난해 11월말 화폐개혁 당시 세대당 15만원 한도에서 신권을 교환해주고 구권을 저금토록 하면서 예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992년 4차 화폐개혁 때 주민들의 예금을 몰수했었던 일 때문에 실제 저축에 참여한 주민은 많지 않았음.
- 북한은 화폐개혁 이후 물가폭등을 비롯한 부작용이 잇따르자 지난 3월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전 노동당 계획재정부장을 총살함.



● **北, 평양-상하이 직항 8월 6일 시작(7/29, 중국신문사)**

- 북한 고려항공이 평양과 중국 상하이(上海)를 오가는 직항노선을 내달 6일부터 운행할 예정
- 상하이의 포털사이트(www.online.sh.cn)에 따르면 이 노선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에 평양을 출발, 상하이에 도착한 뒤 저녁에 평양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
- 고려항공은 현재 베이징과 선양(瀋陽) 등 중국 내 2개 도시에서 정기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올해 4월부터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이 활발해 지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취항 도시 확대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짐.
- 평양-상하이 간 노선은 전세기 차원으로, 북한과 중국은 운행 상황을 지켜보며 정기노선으로의 승격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내 경제)**

- 동해지구에 건설되는 '금야강발전소' 언제(*물을 막기 위해 쌓은 둑) 완공(7/29, 중방)
-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신형 극소형발전기(발전능력 500w, 주파수 60Hz) 생산 및 만포방사공장의 7월 중순 현재 연간계획 117% 초과 달성 등 경공업제품생산 생산성과 선전(7/29, 중통)
- 北-中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식, 리용남(무역상), 류흥재(駐北 中 대사) 등 참가下 평양에서 진행(7/29, 중통)

다. 사회·문화

● **北 함경북도, 불법 컴퓨터프로그램 집중 단속(7/27, 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DVD, MP3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을 접해 월경, 밀수 등이 빈번한 함경북도에서는 중문판 윈도XP 같은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도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음.
- 매체는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함경북도 당 위원회가 '합동검열단'을 조직해 지난달 20일부터 국외 영상물에 대한 집중 검열에 들어갔는데 동영상과 음악을 재생하는 관련 프로그램도 중점 단속하고 있다고 밝힘.
- 원래 북한 내에서는 당국이 지난해 허가한 리눅스 기반의 '붉은별'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으나, 컴퓨터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데다 '중문판 윈도XP'나 '중문판 MS Office' 같은 불법 CD가 장당 3~5위안(북한 공식환율 57~95원)에 거래돼, '붉은별'보다 중국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함경북도가 검열 대상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이유도 최근 북한 내에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국산



프로그램으로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 메모리를 돌려 한국 영화와 음악을 접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임.

- 통신은 현지 소식통이 전한 말이라면서 “이번 컴퓨터 프로그램 검열이 보위부나 보안부가 아닌 함경북도 당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지난해 말 김정일이 어머니(김정숙) 고향 회령에 다녀간 뒤로 함경북도에 대한 중앙의 관심과 배려가 높아지는데 여전히 이 지역에서 밀수, 월경 등 비사회주의 요소가 많이 발생해 9월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정지작업을 벌인 셈”이라고 덧붙임.

● 北월드컵대표팀, 귀국 후 사상비판 회부(7/27, 자유아시아방송)

-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에서 포르투갈에 7-0으로 지는 등 세 경기 모두 패한 북한 축구대표팀이 귀국 후 사상비판에 회부
- 방송은 ‘북한 내부소식에 정통한 중국인 사업가’의 전언을 인용, “지난 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축구선수들을 놓고 사상투쟁회의가 열렸다”면서 “하지만 재일교포인 정대세와 안영학 등은 제외됐다”고 밝힘.
- 평양시 소식통은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박명철 체육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에 참가한 대표선수들에 대한 대논쟁 모임이 있었다”며 “체육성 산하 각 종목별 선수들과 평양체육대학,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체육학부 학생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어 “대표팀의 김정훈 감독과 선수들을 무대에 올려놓고 체육성 산하 종목별 선수대표와 대학대표의 비판이 벌어졌으며, 리동규 해설원이 개별 선수의 결함을 지적하면 다른 참석자들이 뒤이어 비판했다”면서 “회의 말미에는 대표팀 선수들을 한 명씩 내세워 김정훈 감독을 비판하게 했다”고 설명
- 방송은 신의주 소식통의 전언을 인용, “이번 대논쟁의 내용이 ‘김정은 청년장군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것이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마 김정훈 감독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임.

● 北 ‘만성적 식량난’…수해컸던 2008년보다는 양호(7/28, 미국의 소리(VOA))

- 세계식량계획(WFP)은 현재 북한이 확보한 식량이 수요보다 25% 가량 부족하다고 보고, 식량위기 5단계 중 하위 두번째인 ‘만성적 식량난’ 상태로 분류
- WFP의 레나 사벨리 북한 담당 대변인은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만성적 식량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특히 동북부의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지역의 식량 안보가 남부나 해안가에 비해 더 취약하다”고 밝힘.
- 사벨리 대변인은 이어 “북한 당국은 주민 1인당 하루 350그램의 식량을 배급한다고 보고했지만 입증하기는 어렵다”면서 “WFP와 식



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식량이 필요한 것보다 25%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함.

- WFP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은 ‘식량안보 인도주의 단계 통합분류’(IPC)를 토대로, 개별 국가의 식량난을 ‘대체로 식량안보 확보’, ‘만성적 식량난’, ‘극심한 식량과 생계 위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기근과 인도주의적 재해’의 5단계로 나누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하위 두 번째 단계에 해당
- 북한의 수해가 심각했던 2008년에도 WFP는 대부분의 지역을 2단계로 분류했지만, 동북부 지역은 3단계로, 일부 군 지역은 4단계로 평가
- VOA는 “지난 2년간 WFP가 대북사업 모금에 어려움을 겪어, 2008년 640만명이던 수해 대상자수가 올해엔 250만명으로 줄었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사벨리 대변인은 “올해 대북사업을 위해 9천600만 달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6%인 609만달러만 모금됐다”고 말함.

● 北 개성에 50년만의 ‘큰비’…호우 피해 속출(7/29, 조선중앙TV)

- 최근 개성 등 북한 곳곳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50년만에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개성시의 경우 이달 12~19일에만 지역에 따라 최고 324mm(평균 300mm)의 비가 내려 다른 곳보다 피해가 컸음.
- 특히 지난 22일 밤에는 불과 3시간 사이 128mm의 비가 쏟아져 2천 850여 중의 논밭이 물에 잠기고 다리 4곳과 구조물 6개, 살림집 118곳, 여러 곳의 도로가 유실
- 비 피해는 강원도에서도 심했는데 23일 오전 5시를 전후해 내린 집중호우가 원산청년발전소에서 나오는 물과 합쳐지면서 평양과 원산 사이 관광도로 30m가 3m 깊이로 패었음.
- 또 이 도로 밑의 원산시 샘물공급관과 성돈 지구의 상수도관이 파괴되고, 발전소 통신케이블이 절단돼 전력생산에도 차질을 빚었음.
- 자강도에도 22일 저녁부터 23일 새벽까지 폭우가 쏟아져 23일 하루에만 630여 세대의 살림집이 침수되거나 무너졌고, 장자강이 넘치면서 전천과 만포 사이 도로와 다리 20여 곳, 논밭 500정보(495여만 m²)가 유실
- TV는 18~20일 사흘간 폭우가 내린 함경남도 신흥군의 피해 상황을 화면으로 내보내면서, 이 지역 한 광산의 선광장(캐넌 광석을 추려내는 곳) 노동자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다가 헬기로 구조됐다고 전함.
- 이어 신흥군에 내린 비로 성천강 수위가 385cm나 높아져 살림집 220곳과 공공건물 65곳이 완파됐고 영광군과 신흥군을 잇는 영신다리 등 여러 곳의 다리와 1천m 이상의 도로, 500정보의 논밭이 침수됐다고 전함.



● 北가극 ‘홍루몽’, 中서 인기몰이(7/29, 인터네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 지난 5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방중과 함께 중국을 방문, 최근 순회공연을 마친 피바다 가극단의 가극 ‘홍루몽(紅樓夢)’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 신문은 피바다 가극단이 홍루몽 순회공연차 중국 단둥(丹東)에 도착한 5월 2일 현지 언론이 ‘파파라치’ 수준으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았고, 이들의 사진이 인터넷에 돌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당시 중국 언론은 피바다 단원들의 태도가 “쾌활하고 친근했다”고 전하고 이들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홍루몽이 “영화 ‘아바타’ 이후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다”고 평가하는 등 큰 관심을 나타냈다고 전함.
- 신문은 김 위원장 방중과 맞물린 시기 베이징 공연에서 객석이 매진된 것을 비롯, 지난 18일 다롄(大連)에서 순회공연을 마칠 때까지 중국 각지 공연이 만원사례를 기록할 만큼 관객 호응도 뜨거웠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피바다 단원들이 홍루몽 성공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아 “친애하는 영도자(김정일) 동지의 지도와 견해를 따랐다”고 답했다면서, 김정일이 2009년 중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홍루몽 개작을 결정했다는 배경도 자세히 설명
- 신문은 또 최근 김 위원장이 “조선 인민들이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홍루몽 개작과 함께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 제작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北 아리랑 공연 인기…작년보다 관람객 늘 듯(7/30,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8월 2일 시작되는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의 외국인 관람객은 작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전함.
- 스웨덴의 북한 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Korea Konsult) 측은 이 방송에 “‘아리랑’ 공연의 인기가 매우 높아 미국인, 유럽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북한 관광을 신청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예약자가 20% 늘었다”면서 “북한이 정치적인 이유로 관심을 끌수록 북한 관광이 인기를 얻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
-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칠보산, 황해남도 해주 일원과 라진·선봉 지역 등이 새로 개방돼 고려여행사가 이들 지역을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함.
- 고려여행사 측은 “4월 초부터 함흥시내와 마전유원지, 사찰 등을 둘러보는 상품을 개발해 모객에 나섰다”면서 “8월 15일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에 이뤄질 첫 관광에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에서 20여 명이 예약했다”고 말함.



● 北TV, 홍콩 액션영화 ‘엽문’방송(8/1, 조선중앙TV)

- TV는 8시40분 ‘외국영화’ 코너에서 홍콩 액션영화 ‘엽문’을 우리말 더빙으로 방송하면서 ‘중국예술영화 격술가 엽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별다른 설명 없이 중국어 자막과 함께 바로 영화를 상영함.
- 북한 전 지역이 시청권인 중앙TV가 오락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액션영화를 방영한 것은 이례적임.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피바다가극단 창작가·예술인 환영모임, 안동춘(문화상) 등 참가자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진행(7/26, 중통)
- 최상급축구연맹전 4차 경기(男:11개·女:8개팀 참가, 30일간 진행) 종료(7/26, 중통)
- 제25차 송도원 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진행(7/27, 중통)
- 《김일성상》 계관작품 경희극 ‘산올림’, 원산공연 개막(7/27, 중통)
- 조선예술영화 ‘햇빛 밝아라 1부’에 대한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 진행(7/29, 중통)
- 피바다 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홍루몽’ 귀환공연, 평양대극장에서 진행(7/29,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판문점 北대위, ‘美 침략야심 불변’ 주장(7/28, FTV뉴스)

- 판문점 북한측 지역을 지휘 중인 북한군 대위는 “모든 사물이 변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불변의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야심이다.”라고 주장
- 뉴스에 따르면 이 북한군 대위는 “조선에서 전쟁이 멈춘지 반세기가 이미 지났으나 우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

● 北역류 곰즈 단식농성 중(7/31, 미국의 소리(VOA))

- 방송은 북한에 역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씨가 자살 시도에 이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고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데이비드 하웰 영국 외무차관은 지난 28일 영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에서 “곰즈씨가 현재 단식농성 중”이라고 밝힘.
- 하웰 차관은 이날 토론 중 한 의원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곰즈씨의 자살기도 소식을 언급하며 그의 상태를 문자 이같이 답하고, “영국정부는 평양의 대사관을 통해 현재 곰즈씨의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며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임.



● **北박의춘,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7/3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과 미얀마의 핵 협력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30일 미얀마의 행정수도 네이피도에서 니얀 윈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전함.
- 양측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 문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힘.
- 회담에는 북측에서 박 외무상을 비롯한 일행과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했고, 미얀마측에서는 외무성 정치총국장, 아세안총국장을 비롯한 관련 관료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함.
- 박 외무상의 미얀마 방문은 북한 외무상으로서 27년만으로, 북한과 미얀마는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단교한 뒤 24년만인 2007년 외교관계를 회복

● **후진타오, 주중 北대사 신임장 받아(8/1, 연합뉴스)**

- 후진타오중국 국가주석이 최병관 신임 주중 북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음.
- 200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최진수 전임 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4월 말 부임한 최병관 대사는 부임 3개월여 만에 후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함.
- 통신은 1일 신임장 제정 소식을 전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선대 지도자들이 키워 온 양국 우호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돼 왔다”면서 “중국은 양국 당과 인민의 공통된 자산인 양국 우호관계를 ‘전통을 중시하고 미래에 대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신’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 駐北 스웨덴 대사 離任 접견(7/26, 중통)
- 北 박의춘 외무상 일행, 7/25 라오스 비엔티안 도착(7/26, 중방)
- 《정전협정》 체결(1953/7/27) 57주년 관련 북핵문제 등 現한반도 주변 정세에서 미국의 “對北정책 전환 및 평화협정체결 결단” 주장(7/27, 중통·민주조선)
- 北 박의춘 외무상과 라오스 외무상(통룬 씨쑤릿) 회담, 7/26 라오스에서 진행(7/27, 중통)
- 日 자위대의 韓美합동군사연습 옹서버 자격 참가는 “미국이 3각 군사동맹을 완성하여 대조선침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에 대해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출 것” 주장(7/28, 중통·노동신문)
- 한국戰 시기 미군의 ‘역사유물 약탈범죄’를 비난하며 “문화재들의 반환과 정신문화적·물질적 피해와 손실에 대한 성실한 인정과 사죄 및 배상” 촉구(7/28, 중통)



- 김영남, 페루 독립 189돌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7/28, 중통)
- 최태복(黨 비서), 베트남 농민동맹대표단(단장:웬 꾸옥 끄영 농민동맹중앙위원장)과 담화(7/28, 중통)
- 김영남, 駐北 독일 新任대사 ‘게르하르트 티데만’ 신임장 접수(7/29, 중통)
- 김영일 黨 중앙위 국제부장, 訪北 ‘호정약’ 中 외교부장 조리와 담화(7/29, 중통)
- 駐北 이집트 대사, ‘7월 23일 혁명’ 58돌 즈음 김용준(교육위원장), 김형준(외무성 부상), 문성모(외교단사업국장) 등 초청下 연회 개최(7/29, 중통)
- 駐北 말레이시아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평양시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서 친선노동(7/29, 중통)
- 김영남, 모로코 국경절 즈음 ‘모하메드 6세’ 국왕에게 축전(7/29, 중통)
- 김영남, 파키스탄 여객기 추락사고 관련 同國 대통령에게 위문전문(7/29, 중통)

나. 6자회담(북핵)

● 北김영춘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 강화”(7/26,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26일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김 부장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57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반북) 대결과 새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백두의 담력과 공격정신으로 적들을 맞아치고 백승만을 떨치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들 방송은 전함.
- 김 부장이 발언한 ‘새롭게 발전된 방법에 의한 핵억제력 강화’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이미 언급한 것임.
- 그렇지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며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다 같은날 외무성도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들어 ‘핵억제력’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됨.
- 그는 이어 “만약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거둬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포함한 무진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함으로써 적들에게 진



짜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전쟁의 화근을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라고 강조

- 또 천안함 사건에 언급, “미국이 저들의 추악한 정치 군사적 목적달성을 노리고 이명박 역적패당과 공모 결탁하여 꾸며낸 파렴치한 날조극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특대형의 범죄사건”이라고 주장
- 이와 함께 그는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반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확고히 세워 국방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만단(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는 것”을 촉구

■ 기타 (6자회담(북핵))

- 오바마 정권은 출범년도에 “北의 2차 핵시험을 촉발시켰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천안함 피격사건의 “강온 양면술(韓美합동군사연습↔美北 대령급 실무접촉) 외교로 정세를 오판하면 北은 같은 일(핵시험)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시사(7/26, 조선신보)
- 일본 外相의 6자회담 재개 부정적 발언(조기재개 곤란, 北 태도여하에 따라) 관련 “일본은 6자회담의 훼방꾼, 불청객으로 이 문제해결에 끼어들 아무런 명분도 없다”고 ‘일본의 6자회담 배제’ 주장(7/26, 중통·노동신문·평방)

3. 대남정세

● 北, 이번엔 ‘더 큰 억제력 대응’ 위협(7/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과 관련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적들의 억제력 과시에 선군으로 다져진 더 크고,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 대변인 성명은 “미국과 괴뢰들이 무력 시위니, 경고니 하면서 누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면서 “힘은 힘으로, 제재는 제재로 짓뭇개 놓는 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본때”라며 이같이 위협함.
- 성명은 또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아직 해명되지 못해, 유엔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데 대한 의사표시가 되고,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 문제에 관한 협의가 조·미 사이 진행중”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제재 등이 언급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
- 앞서 북한은 24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맞서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



고 밝혔고,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의 추가 제재에 “핵억 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 으로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함.

● 北, ‘평양상주사무소 추진’ 북민협에 초청장(7/28, 연합뉴스)

- 북한이 대북 인도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초청장을 보내, 이 단체의 평양 상주사무소 설치 계획이 실현될지 주목
- 박현석 북민협 사무총장은 28일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았고 통일부에 초청장을 첨부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방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다”며 “북측과 비자발급 문제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함.
- 통일부가 북민협의 방북신청을 허가하면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제외한 첫 방북임.
- 당초 북민협은 7월 21일이나 28일 방북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북측에 요청했으나 중국을 거쳐 초청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짐.

● 北…‘잇단 한·미군사연습은 전쟁도발’(7/28, 연합뉴스)

- 통신은 31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이날 ‘제2의 6.25를 몰아오는 북침실동연습을 단죄한다’ 제목의 고발장을 발표해 올해 연말까지 한미 양측이 10여 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연이어 벌이는 연합훈련들이 그 규모와 기간 그리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사상 최대의 선행침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함.
- 통신은 “또 다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든 자위적 억제력을 총발동하여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총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韓美 연합군사훈련 실시(7/25~28)는 “우리(北)에 대한 입체적인 실동연습”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7/26, 중통·노동신문)
-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7/28)은 “통일세력 對 분열세력 등 세력간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고 離間 및 “보수집권세력에게 반대표로 심판” 선동(7/27, 평방)
- 韓美 해상연합훈련 관련 규모나 내용상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명백히 전쟁연습이고 새 전쟁도발의 서곡”이라고 주장(7/28, 평방)



- 대통령의 제3차 한-SICA(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 참석 및 참가국 정상들의 천안함 피격사건 규탄 ‘특별선언문’ 발표를 “외세의존, 사건의 국제화”라며 “검열단 및 공동조사 수용” 주장(7/29, 중방)
- 北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핵억제력 강화 등 강경대응 표명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선군노선 목표는 “평화실현 즉, 2012년 강성대국건설”이라고 代辯(7/29, 조선신보)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PSI 차단활동에 강제력 부여 필요”(8/1)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수출 및 무기제작에 필요한 관련물자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 저지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에 강제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해양정책 전문가인 마크 발렌시아 노틸러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A) 산하 한미연구소(USKI)의 북한전문 사이트 ‘38 노스(North)’에 기고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음.
- 발렌시아 연구원은 “PSI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면서 “확산방지구상이 성공하려면 (PSI 불참 국가들까지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이 WMD 관련물자 차단에 필요한 ‘합당한 조건’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차단여부를 결정해 실행에 옮기는 등의 권한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음.
- 그는 이런 상황을 전제로 “최선의 방법은 유엔기(旗)를 단 배가 공해상에서 의심물자를 신고 있는 선박의 저지와 검색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저지활동에 물리력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PSI를 유엔 시스템의 일환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음. 또 WMD 의심물자 관련정보를 파악하고, PSI 활동에 대한 조정과 재원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할 ‘중립적인 성격의 조직’을 신설하게 되면 ‘이중 잣대’ 논란을 제거하면서 PSI 활동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발렌시아 연구원은 “만일 미국이 이런 조건들을 충족해 나갈 용의가 있다면, 천안함 사건 이후 조성된 환경 아래서 ‘합당한 대의명분’을 위해 (WMD 의심물자) 저지활동에 물리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유엔 차원의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음. 그는 현재의 PSI 체제에서는 북한이 저지의 그물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음. 북한은 미사일과 기타 무기, 이와 관련된 기술을 비행기 또는 다른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수출함으로써 추적과 예방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 특히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거치는 ‘육로 우회수송’ 방식을 통해



WMD 관련 부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추적이 더욱 힘들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북한이 수출대상 국가에 조립공장을 설립해 수출경로 추적을 차단해 버릴 수도 있다고 발레시안 연구원은 지적했음. PSI는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인 2003년 5월 이른바 ‘네오콘’의 주장에 따라 도입됐으며, 지난해 5월 전면가입을 선언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97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 북한은 한국 주관으로 10월중 부산항과 인근 해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가해 PSI 해상차단 및 검색 훈련을 실시하려는 계획에 대해 “군사적 충돌과 북침전쟁 도발을 서슴지 않으려는 흥계의 발로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음.

● 美 “대북제재, 이란과 다른 맞춤형 제재”(7/31)

- 미국 국무부는 30일 대북 제재와 대이란 제재는 방식을 달리할 것이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맞춤형’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대이란 제재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란과 북한은 두 개의 다른 나라”라며 “우리는 동일한 접근법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음.
- 크롤리 차관보는 “특히 이란은 에너지 분야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이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했듯이 북한 정부와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율된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채택한 이란 제재법은 이란 에너지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국내 기관은 물론 해외 기업 및 금융기관들까지도 제재를 가해 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고강도 제재방안임. 대북제재는 에너지 분야 자원을 가진 이란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크롤리 차관보의 언급은 양국이 국제사회와 맺고 있는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식 제재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보임.
-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도 전날 하원 감독. 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과 북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고립을 꺼리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은 ‘고립이 체제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라며 비슷한 인식을 밝힌 바 있음. 크롤리 차관보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미얀마 방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은 상습적인 핵 확산국”이라면서 미얀마는 북한과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또 북한과 미얀마의 관계를 둘러싸고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이 미얀마와 핵 협력에 나섰는지 알기 어렵다면서도 “이는 북한의 과거 행태에 비춰볼 때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이를 면밀히 주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한편, 미 상원의원 32명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향해 미얀마의 반인권 및 전쟁 범죄를 다룬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지지하라고 30일 촉구했음.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 상원 정보위원장과 저드 그레그(공화) 의원 등은 미얀마에서 소년병 징집, 소수민족 탄압, 전시 여성 강간, 강제 노역 등 다수의 인권침해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멀린 “北지도부 고립시키는 것 정말 중요”(7/29)

-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북한 지도부는 매우 예측할 수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계속 고립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멀린 의장은 지난 25일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했을 당시 미군을 상대로 한 행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북 압박을 계속 증강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 국방부가 28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멀린 의장은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면서 “북한 지도부가 미래에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이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임을 전하면서 한국과의 긴밀한 동맹 유지를 강조했다.

● 한·미, 내달 2일 대북 금융제재 협의(7/28)

-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이 다음달 2일 우리 정부당국자들과 만나 추가 대북금융 제재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아인혼 조정관이 다음 달 1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2일 정부 인사들과 만날 것으로 안다”며 “현재 실무선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아인혼 조정관은 다음달 2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하고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준 차관보,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등을 각각 만나 금융제재를 비롯한 추가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또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자들과도 면담해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정보와 금융거래 자료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 아인혼 조정관은 우리 정부측과의 협의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추가 대북제재의 원칙과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아인혼 조정관 일행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포함해 국무부와 재무부 등 범부처 관계자 5명 내외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인혼 조정관은 한국측과 협의를 마친 뒤 3일 다음 행선지인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일부 국가를 방문할 계획임. 그는 그러나 중국은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北김영춘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 강화”(7/26)

-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은 26일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춘은 이날 평양방송과 평양방송이 전했다. 김 부장은 이날 정전협정 체결 57주년을 맞아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연설을 통해 “오늘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반북) 대결과 새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된다”며 이같이 말하고 “이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주적 권리이며 백두의 담력과 공격정신으로 적들을 맞아치고 백승만을 떨치는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대응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틀 방송은 전했다.
- 김 부장이 발언한 ‘새롭게 발전된 방법에 의한 핵억제력 강화’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달 26일 이미 언급한 것임. 그렇지만 북한 국방위원회가 24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보복성전’을 다짐하며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한 데다 같은날 외무성도 미국의 추가적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들어 ‘핵억제력’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주목됨.
- 그는 이어 “만약 미제와 이명박 역적패당이 우리의 거둬지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는 자위적 핵억제력을 포함한 무진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자들과 그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함으로써 적들에게 진짜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전쟁의 회근을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천안함 사건에 언급, “미국이 저들의 추악한 정치 군사적 목적달성을 노리고 이명박 역적패당과 공모 결탁하여 꾸며낸 파렴치한 날조극이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특대형의 범죄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이와 함께 그는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주체적인 전쟁관점과 반제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온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확고히 세워 국방공업을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며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온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지며, 만단(만반)의 전쟁준비를 갖추는 것”을 촉구했다.

● 조선신보, 北 ‘3차 핵실험’ 가능성 시사(7/26)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6일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보복성전’을 주장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핵억제력 강화’를 천명한 것과 관련해 “말로만 엄포를 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양면술, 귀결은 핵억제력 강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은 핵시



험(핵실험)을 핵억제력 확보의 필수적인 공정상 요구로 간주하고 있고 과거에도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저 없이 단행했다”며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28일 “핵억제력을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24일에는 미국의 제재조치에 “핵억제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음.

- 조선신보는 이어 “미국의 상대는 핵억제력을 갖춘 나라”라며 “오바마 정권은 출범 1년째에 조선의 2차 핵시험을 촉발시켰다. ‘천안’ 외교의 실패로 궁지에 몰린 (오바마) 정권이 정세를 오관하면 같은 일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음. 북한은 2006년 10월9일에 이어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했음.
- 신문은 이어 “미국이 강은 양면술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시간이 허비되고 문제해결은 요원해지고 그 사이에도 조선의 핵억제력은 강화된다”며 “천안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화가 좌절되거나 적대국의 제재와 군사도발이 미리 정한 금지선을 넘어섰다고 최종판단할 경우, 조선은 자위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 강위력한 억제행동을 지체 없이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음. 신문은 이 같은 위협성 발언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존중하는 입장에 선다면 오늘의 조선반도 사태진전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은 호전세력들의 발광증이 아니라 현재의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의 흐름”이라며 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새 행정명령, 북한 직접 특정한다”(8/1)

-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해 검토 중인 새로운 행정명령은 특정한 불법행위들을 규제하는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특정(Country-specific)하는 ‘대북 행정명령’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대테러와 관련한 특정한 행위들을 규제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직접 특정하는 대통령령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신설되는 ‘대북 행정명령’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위폐·마약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중단과 미국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교적 협조를 통해 거래주의와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유형은 ▲재래식무기와 사치품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 ▲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 ▲유엔 대북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이행강화 등 모두 3가지로서 서로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가질 것으로 전



해졌음. 이 소식통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이 제3국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이 재무부 등을 통해 해당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정치·외교적 설득노력을 편다면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음. 그는 또 미국 금융기관이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란식 3단계 제재조치와의 차별성에 대해 “이란은 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로 연결돼 있고 금융거래도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3단계 제재가 효과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이후 금융거래가 다 숨어 들어갔다”며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 北중앙통신 “잇단 한미군사연습은 전쟁도발”(7/31)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동해상에서 벌어진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음. 중앙통신은 이날 ‘제2의 6.25를 몰아오는 북침실동연습을 단죄한다’ 제목의 고발장을 발표해 올해 연말까지 한미 양측이 10여 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기로 한 것을 거론하면서 “연이어 벌이는 연합훈련들이 그 규모와 기간 그리고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사상 최대의 선행침략전쟁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이 통신은 “또 다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제2의 6.25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모든 자위적 억제력을 총발동하여 침략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하고 미국이 우리 인민에게 끼친 죄악을 총결산하고야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인혼 내주 한국, 일본 방문(7/30)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함. 미 국무부는 29일 아인혼 조정관이 내달 2~3일 서울, 3~4일 도쿄를 방문해 대북, 대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한·일 방문에는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400만 달러를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주도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동행함. 아인혼 조정관은 서울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레브리핑에서 아인혼 조정관의 한국방문 기간에 미국의 추가 제재와 관련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그의 귀국후 제재조치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으로 여겨지는 중국을 8월 하순 방문할 계획임. 그는 이날 하원 ‘갑독·정부개혁 위원회’에서 대이란 제재문제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글레이저 부차관보와 나란히 출석, 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음.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북한이 (지금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핵확산 우려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같은 구체적인 부문에서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美 대북금융제재 3단계 진행(7/27)

-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3단계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음. 워싱턴 고위 외교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제재대상 지정 ▲제재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에 해당 명단 통보 및 거래중단 권고 ▲제3국 금융기관의 비협조시 미국 금융기관과 이들 제3국 금융기관간의 거래 중단 등 3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예를 들어 미국의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중국의 상하이은행이나 뱅크오브차이나와의 거래를 중단하면 중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북한 관련 계좌가 대부분 중국과 동남아 등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중동에도 일부 개설돼 있지만 유럽은 별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 앞서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21일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의 미국 금융기관 거래 차단 방침을 밝히면서 이를 위해 제3국 은행이 스스로의 명성이 훼손될 우려를 이용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과의 금융거래 중단 카드로 압박하며 제3국 금융기관의 대북거래 단절 협조를 유도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음. 미 정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북한 기관,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이미 작성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대상에는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도 중복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한편 이 소식통은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검토 보도에 대해 “리처드슨 주지사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어하나 우리가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음.
- 또 이란 및 북한에 대한 제재조정관을 겸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 대북제재 협의차 유럽을 방문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북한이 아닌 이란에 대한 제재안 조율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200여개 계좌를 발견해 불법계좌로 의심되는 100여개에 대한 동결조치 등에



나섰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아인혼 보좌관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핵실험 강행시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샤프 “천안함 北 기습도발..정전협정 위반”(7/27)

- 월터 샤프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57주년 기념식에 참석, “북한은 천안함에 대한 기습도발을 했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내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지난 57년간 평화만 지속된 것은 아니며 천안함 사태와 같은 기습도발 행위는 북한의 수많은 도발의 한 사례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한국전쟁으로 수백만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기억해야 하며 독재자는 평화를 영원히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힘을 합쳐 북한의 도발행위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샤프 사령관은 “평화와 번영만이 북한에 남아 있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하며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이웃 국가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한편 비핵화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 유엔사는 북한에 대해 억제력을 행사하며 필요시 격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내에 평화가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어 유엔사 군사정전위 수석대표인 윤영범 소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은 정전협정 체결 57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한반도에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며 “그만큼 유엔사 및 중감위의 역할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스위스 중감위 대표 요스 소장은 “중감위는 정전 및 정전 목표를 유지하는데 지금까지 기여해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여분 진행된 정전협정 조인 기념식 행사후 참석자들은 북측 판문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철모를 쓴 북한 경비병 20여명이 남측을 감시했다.

● “美, 北 정전협정위반 안보리 문서화 요구”(7/27)

- 미국이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결과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문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유엔 미국대표부가 ‘천안함 침몰은 북한의 의도적·계획적인 행동의 결과로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결론지은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독자적인 천안함 침몰 원인조사 보고서를 유엔의 공식문서로 취급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 주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과 관련, 교섭에 의한 사태 수습에 나서야한다고 요청했음. 미국은 유엔군사령부의 조사결과를 유엔안보리의 공식문서로 취급함으로써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하겠다는 의도임.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반대, 주한 유엔사령부 보고서의 안보리 문서화를 유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판문점 北대위, ‘美 침략야심 불변’ 주장”(7/28)

- 판문점 북한측 지역을 지휘 중인 북한군 대위는 “모든 사물이 변하지만 세상에서 유일한 불변의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야심이다”라고 주장했다고 대만의 ‘FTV뉴스’(民視新聞)가 28일 북한 발로 보도했음. FTV뉴스에 따르면 이 북한군 대위는 “조선에서 전쟁이 멈춘지 반세기가 이미 지났으나 우리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음. 평양-판문점 간 연도는 촬영이 금지돼 허용된 극소수 화면 이외에는 찍을 수 없었으며 개성-판문점 간에서는 ‘층층의’ 검문소를 거쳤다고 24시간 TV 뉴스 채널인 FTV뉴스는 말했음. 북한은 판문점을 외부인사에게만 공개하고 있으며 FTV뉴스가 취재하러 오기 전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이곳을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다. 중·북 관계

● 후진타오, 주중 北대사 신임장 받아(8/1)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최병관 신임 주중 북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았음. 1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후 주석은 지난 3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병관 대사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이란,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등 8개국 신임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았음. 2000년부터 10년간 근무한 최진수 전임 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4월 말 부임한 최병관 대사는 부임 3개월여 만에 후 주석에게 신임장을 제정했음. 중국 외교부와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신임장 제정식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신임장 제정 소식을 전하면서 후진타오 주석이 “선대 지도자들이 키워 온 양국 우호관계는 국제정세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발전돼 왔다”면서 “중국은 양국 당과 인민의 공통된 자산인 양국 우호관계를 ‘전통을 중시하고 미래에 대처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정신’에 따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통신은 후 주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난 5월 초 방중을 회고하면서 “이번 방중이 양국 우호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 “北, 남북교역 중단 후 中주문 생산”(8/1)

-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북교역을 중단하자 곧바로 북한이 중국기업들과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1일 전해졌음. 대북 소식통은 이날 “대북위탁가공업체들이 지난 5월24일 ‘천안함 조치’로 원·부자재를 반출하지 못한 뒤 북한 공장들이 중국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중국기업들이 북한과 계약한 위탁가공제품은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될 물량”이라고 밝혔음. 한 대북위탁가공업체 관계자도 “지난 6월 말 통일부가 이미 계약한 대북 원·부자재에 한해 반출을 허용한 뒤 북측에 연락했는데 벌써 중국업체와 계약한 상태였다”며 “북한이 중국의 주문량을 먼저 생산하겠다고 해서 우리 제품의 납기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음.
- 정부가 대북위탁가공업체들에게 교역중단의 유예기간을 주기까지 한달이 걸렸고 이 기간에 북한 공장들이 중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임. 중국이 빠르게 한국 업체들의 빈자리를 차지한 것은 자국 내 인건비 부담이 커진데다 북한이 거래처 확보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됨. 북측 공장 관계자들은 남북교역 중단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최근 중국의 접경지역인 단둥 등지에서 계약을 많이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은 위탁가공료를 많이 주는 남측과 거래를 유지하고 싶어하지만 계속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올며 겨자먹기’식으로 중국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들의 분석임. 한 대북 전문가는 “남북교역이 중단돼도 북한은 중국 때문에 그럭저럭 공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 업체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일 만큼 타격이 더 크다”며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남북 경협 신뢰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음.

● 北 김영남 “홍루몽, 북·중 우의의 상징”(7/30)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2개월여의 중국 순회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북한 피바다가극단의 ‘홍루몽’에 대해 “북·중 양국의 우호 증진에 큰 공헌을 했다”며 극찬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음. 피바다가극단이 지난 29일 평양대극장에서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외교관들과 평양 관객들을 위해 홍루몽을 공연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상임위원장이 류홍차이(劉洪才) 주북한 중국 대사에게 “홍루몽의 중국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두고 중국인들로부터 찬사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 김 상임위원장은 이어 “이번 공연은 북·중간의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서 양국의 우의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홍루몽은 북·중 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음. 류 대사는 이에 대해 “홍루몽이 북한 예술의 정수를 선보였을 뿐 아니라 양국간 두터운 우의를 다지게 했다”며 “홍루몽에 이어 북한에서 준비 중인 가극 ‘양산박과 축영대’도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화답했음. 이에 앞서 지난 21일 평양역



에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안동춘 문화상 등 북한 측 고위 인사와 류 대사 등 중국 측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피바다가극단 귀국 환영대회가 열리는 등 북한은 홍루몽의 이번 중국 순회공연을 성공적으로 평가했음.

- 중국 원작을 가극으로 만든 북한판 홍루몽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에 맞춰 지난 5월 6일 베이징에서 첫선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후허하오터((呼和浩特)와 창샤(長沙), 우한(武漢), 푸저우(福州), 선전, 충칭(重慶), 시안(西安), 텐진(天津), 창춘(長春), 다롄(大連) 등 13개 도시를 순회하며 30여차례 공연됐음. 신화통신은 홍루몽이 중국인들에게 친숙한 고전인데다 출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가창력으로 인해 중국 순회공연이 흥행에 성공했으며 배우들도 큰 인기를 누렸다고 소개했음.
- 북한의 가극 홍루몽은 1960년대부터 북·중 우호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2009년 북·중 친선 60주년을 맞아 현대판 대형 가극으로 새롭게 태어났음. 피바다가극단은 홍루몽의 후속작으로 남녀 간의 이뤄지지 못한 애절한 사랑을 다룬 중국의 고사 ‘양산박과 축영대’를 소재로 한 대형 가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중국 측과 극본 제작 등을 협의 중임.

● 中후정궈, 北서 양국우호관계 재확인(7/30)

- 북한을 방문 중인 중국의 후정궈(胡正躍)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30일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북·중 우호 관계를 재확인했음. 후 부장조리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담당 책임자로서 지난 26일부터 나흘째 방북 중임.
- 신화통신은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후 부장조리가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을 점임하고 있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과 북한 관계를 매우 중요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후 부장조리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선린관계와 우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의 변함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 부위원장은 “북중 양국 지도자들의 지도로 양국관계가 더 강화되고 발전돼 왔다”며 “북한은 중국 측과 모든 방면에서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화답했음. 후 부장조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를 조율하는 업무를 맡고, 지난해 8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조문단으로 방한했으며, 같은 해 1월에는 방북해 북중 우호의 해 행사 실무를 담당했음.
- 그의 이번 방북은 지난 5월 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이후 북한을 방문한 중국의 최고위 인사인데다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조치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후 부장조리가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을 면담했다고 짚막하게 보도했음.



● “北, 무산 철광석 중국에 팔아 옥수수 대량수입”(7/29)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무산광산 철광석의 중국 수출을 2배 이상으로 늘려 옥수수를 대량 수입하고 있다고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가 29일 전했다. 이 단체는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무산세관을 통과해 중국으로 들어가는 철광석의 양이 7월 초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면서 “20일 전만 해도 무산세관을 통과하는 25t 트럭이 하루 평균 50~60대였는데 요즘은 100대 이상으로 늘어 하루 철광석 수출량도 1천200여t에서 2천500t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통신원은 또 “철광석을 운반하러 들어오는 중국 트럭에 옥수수 포대가 가득 실려 있는 광경이 자주 목격된다”면서 “북한이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한 대금으로 옥수수를 사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이처럼 옥수수 수입이 단기 급증하면서 이달 중순 kg당 1천200원까지 치솟았던 무산시장의 쌀값이 900원대로 떨어졌고, 옥수수 값도 kg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했다고 이 통신원은 덧붙였다. 한편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외화사정 악화로 북한 외화벌이 기관에 지급되던 수입대금용 달러가 끊겨 식량 수입이 일시 중단되는 바람에 일부 지역의 장마당 쌀값이 kg당 1천200원대까지 폭등했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 中, 외교부 부장조리 방북 확인(7/29)

- 중국이 외교부의 아시아 담당인 후정웨이(胡正躍) 부장조리(차관보급)가 28일 현재 방북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후정웨이 부장조리가 이끄는 중국 측 대표단이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장 대변인은 “이는 양국 외교부 간의 정상적인 교류”라면서 “후 부장조리는 북한 외무성 등 관계 부처 고위급 책임자들과 만나 양국 관계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도 26일 후정웨이 부장조리 일행이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번 방문은 북한의 천안함 공격에 대응한 군사조치로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된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음. 또 중국 중앙정부의 고위관리가 방북한 것은 지난 5월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한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후정웨이 부장조리는 아시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차관보로서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를 조율하고 지난해 8월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조문단으로 방한했으며 지난해 1월 방북, 북중 우호의 해 행사 실무를 담당하는 등 남북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음.
-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이번 방문이 정례적인 교류차원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고 말하면서도 천안함 사태 이후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것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었음.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후 부장조리가 6자회담의 책임자는 아니지만 이번 방북



을 통해 자연스럽게 천안함 사태 및 한미 연합 훈련 이후의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 재개문제 등을 논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 일각에서는 연합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핵억제력으로 맞설 것”이라고 반발했고 중국도 이번 훈련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반대입장을 펴 왔기 때문에 후 부장조리의 방북을 통해 북·중이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라. 기 타

● 北박의춘,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7/31)

- 북한과 미얀마의 ‘핵 협력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이 30일 미얀마의 행정수도 네이피도에서 니안 윈 미얀마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했다. 양측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관계 발전 문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간 논의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2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앞두고 미얀마 군사정권에 북한과 핵 협력에 나서지 말라고 경고하는 등 양국의 핵 협력설에 깊은 우려를 표시했음.
- 회담에는 북측에서 박 외무상을 비롯한 일행과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했고, 미얀마측에서는 외무성 정치총국장, 아세안총국장을 비롯한 관련 관료들이 참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박 외무상의 미얀마 방문은 북한 외무상으로는 27년만으로, 북한과 미얀마는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사건으로 단교한 뒤 24년만인 2007년 외교 관계를 회복했음.

● “스위스, 北계좌 불법 적발시 조사”<RFA>(7/31)

-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의 불법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보되면 관련 기관을 통해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했다. 스위스 경제사무국의 롤랜드 보크 제재국장은 이날 RFA와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대상에 오른 북한의 개인이나 은행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되고 그 밖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음. 그는 “스위스에 500여개의 은행이 있는데 어떤 은행과 계좌를 말하는지, 자금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면 이를 스위스 정보 기관에 넘겨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정보국 뿐 아니라 검찰, 금융감독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음.
- 보크 국장은 “원칙적으로 유엔이 명시한 제재 대상이 아니면 북한의 개인이나 기업이 스위스를 비롯한 해외에서 은행계좌를 열 수 있다”며 “하지만 자금의 성격과 이동이 불법이라면 스위스의 사법당국은



물론 관련 정부 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그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정기적으로 미국측과 만나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고 덧붙였음. 앞서 룩셈부르크 재무부 대변인도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의 해외계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면밀히 주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적절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음.

● “룩셈부르크, 北해외계좌 불법행위 주시”<RFA>(7/28)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 대부분이 은닉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룩셈부르크 정부가 해외계좌를 통한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주시할 방침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했다. 룩셈부르크 재무부 대변인은 RFA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의 해외계좌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불법행위를 면밀히 주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적절한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룩셈부르크는 돈세탁을 비롯한 불법행위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한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룩셈부르크 정부는 해외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돈세탁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제규범에 따라 국내법을 규칙적으로 조정한다”면서 “불법행위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지난 3월 김정일 위원장이 긴급히 외국로 도피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 스위스 은행에 보관해 오던 미화 40억달러 규모의 비자금을 룩셈부르크 은행으로 옮겼다고 보도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룩셈부르크 총리실은 “북한 금융자산의 존재를 나타낼 만한 단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 관계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아인혼 방한.. “내일 韓당국자들과 얘기할 것”(8/1)

-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이 한국 정부와 추가 대북제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일 방한했음. 이날 밤 8시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제재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내일 한국 당국자들과 만난 뒤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주한 미국대사관 측이 준비한 차량을 타고 서울 시내 숙소로 향했음. 아인혼 조정관은 2일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을 시작으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이용준 차관보와 면담, 천영우 제2차관과 오찬, 조현 다자외교조정관 및 청와대 고위관계자 면담, 위 본부장과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함.



-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같은 날 오전 이 차관보와 면담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갖는 데 이어 오후에는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 대북제재 방안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아인혼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팀은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해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됐다. 아인혼 조정관은 3일 오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오찬한 뒤 같은 날 오후 일본 도쿄로 출국함.

● 美대북제재팀 오늘 방한..대북금융제재 협의(8/1)

-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전담 조정관이 1일 저녁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함. 아인혼 조정관은 2일 오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조찬회동을 갖는데 이어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준 차관보를 차례로 면담한 뒤 천영우 외교부 제2차관과 오찬을 겸한 업무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 이어 오후에는 조현 다자외교조정관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저녁에는 위 본부장과 만찬회동을 갖음. 아인혼 조정관은 특히 2일 오전으로 예정된 이 차관보와의 면담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텝)을 갖는데 이어 오후에는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 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의 추진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오전에는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부처와 금융감독당국을 방문한 뒤 같은 날 오후 일본 도쿄로 출국할 예정이다.
- 아인혼 조정관이 이끄는 대북제재팀에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를 비롯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NSC), 국방부, 재무부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할 예정이다.

● <아인혼 '3개의 모자' 쓰고 한국 온다>(7/30)

- 대북 금융제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조정관이 모두 '3개의 모자'를 쓰고 이번주말 방한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향간의 관심은 주로 '대북·대이란 제재조정관'에 쏠려 있지만 그의 또 다른 공식 직함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자문관'이고 '한·미 원자력협정 미국측 카운터파트'라는 비공식적 역할까지 맡고 있음. 이에 따라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한은 대북 금융제재 협의를 넘어 군축·비확산 이슈와 한·미 원자력협정 문제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현안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임. 실제로 아인혼 조정관은 방한기간 외교부 내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에 군축·비확산과 원자력협정 개정을 전담하고 있는 조현 다자외교



조정관과도 면담일정을 잡고 있음.

- 초미 관심사인 대북 금융제재를 놓고는 위 본부장과 미국의 독자적 금융제재 방안을 협의하고, 조 조정관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의 이행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임. 이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결의안 1929호 이행에 대한 양국의 협조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또 다른 관심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임. 한·미 양국은 당초 올 상반기 중 시작하려던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9월 이후로 미루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따라서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원자력협정 논의가 큰 틀을 잡을 것이란 예상이 나옴.
- 외교 소식통은 “아인혼 조정관이 비공식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 미측 카운터파트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공식적 역할인지 여부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지는 대면협의를 가져봐야 안다”고 말했음.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수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아인혼 내주 한국, 일본 방문(7/29)

-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아인혼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내주 한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함. 미 국무부는 29일 아인혼 조정관이 내달 2-3일 서울, 3-4일 도쿄를 방문해 대북, 대이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한·일 방문에는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자금 2천400만 달러를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주도한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가 동행함.
- 아인혼 조정관은 서울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 행정부의 대북 추가 제재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인혼 조정관의 한국방문 기간에 미국의 추가 제재와 관련한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혀, 그의 귀국후 제재조치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아인혼 조정관은 대북 추가 제재의 실효성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을 8월 하순 방문할 계획임.
- 그는 이날 하원 ‘감독·정부개혁 위원회’에서 대이란 제재문제를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 글레이저 부차관보와 나란히 출석, 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음.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해 북한이 (지금과는) 기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독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중국은 핵확산 우려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같은 구체적인 부문에서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



다”며 “우리는 중국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美해군, 연합훈련 장소 ‘일본해’로 바뀐다(7/29)

- 미국 해군이 동해상에서 진행됐던 한·미연합훈련 장소를 ‘동해’(EAST SEA)로 표기한 지 하루 만에 ‘일본해’(Sea of Japan)로 모두 고친 것으로 29일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음. 미 해군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www.navy.mil)에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동해 연합훈련을 소개한 사진기사의 제목에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했음. 특히 김태영 국방장관이 지난 27일 동해상에서 훈련 중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방문한 사진 기사의 제목도 일본해로 표기했음. 앞서 미 해군은 25~26일 같은 홈페이지에서 훈련에 참가한 조지워싱턴호와 원자력추진 잠수함 ‘투산’,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등 주요 참가 전력의 훈련을 소개한 사진기사의 제목을 ‘EAST SEA’(동해)라고 표기해 관심을 끈 바 있음.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서도 훈련 장소를 한국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일본해로 표기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음.
- 외교가에서는 미 해군이 ‘동해’ 표기를 한 직후 일본측이 문제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미 해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usfk.mil)를 통해 이번 동해 연합훈련을 소개하면서 동해를 ‘SEAS EAST OF KOREA’로 표기했으며 앞으로 남은 일련의 연합훈련도 ‘동·서해 연안’(east and west coasts of Korea)에서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해를 ‘SEAS EAST OF KOREA’로 표기하고 있다”면서 “동해라는 표기 사용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종훈-커크, 금주 한미FTA 실무협의 논의(7/28)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금주 중에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에 대해 논의함.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가 조만간 전화통화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양측간 (일정을) 협의 중이며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음. 최 대표는 또 ‘조만간이란 뜻이 금주 내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의 전화통화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음.
-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향후 실무협의 논의 일정과 어떤 형태로 협의를 진행할 지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의 전화통화가 이뤄질 경우 실무협의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최 대표는 “실무협의를 아니다”라고 답변,



실무협의 진행을 위한 사전조율 성격의 전화통화임을 암시했음. 이번 전화통화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말 커크 대표에게 한미 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임.

● 한미 연합훈련 이틀째..대잠수함 공방훈련(7/26)

- 한국과 미국은 동해 상에서 진행 중인 연합훈련 이틀째인 26일 오전부터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등의 훈련을 실시했음. 한미 연합사와 합참에 따르면 전날 동해 상으로 이동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와 아시아 최대 수송함 독도함, 한국형 구축함, 양국 잠수함 등 20여척은 동해상으로 침투하는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고 공격하는 ‘대잠 자유공방전 훈련’을 진행했음. 이 훈련은 아군 구축함과 잠수함이 동해 수중으로 침투하는 적의 잠수함을 탐지, 식별해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음.
- 이에 군 관계자는 “동해에서 어제 대잠수함 침투 징후 포착 훈련에 이어 오늘은 적의 잠수함을 발견하고 이를 공격하는 훈련을 한다”면서 “이 훈련은 실제 어뢰 등 수중무기 발사보다는 양국 함정의 통신 교환 등 전투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음. 또 전투지역으로 전개된 미국 항모전투전단의 생존성과 효율적인 전투력 발휘를 위한 전투기 사격훈련도 병행됐음. 군 관계자는 “양국 전투기들이 항모전투전단이 전개된 지역에서 적의 공격을 가상해 이를 격퇴하는 연합 공군 편대군 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한다”며 “실제 사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음. 이 관계자는 “적의 각종 도발 상황을 가정해 양국 전투기들이 기동하는 연합 전술기동훈련도 실시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틀째 훈련은 강원도 동해 동방 및 북방 해상과 울릉도 인근 및 북방 해상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격이 이뤄지는 구역은 거진 동방 16km~40여km, 정동진 동방 70km~100여km 지점 등에 설정됐으며 거진 동방 해상은 북방한계선(NLL)에서 13.3km 남쪽임. 지난 25일부터 ‘불굴의 의지’라는 훈련명칭으로 동해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과 독도함, 3천200t급 한국형 구축함(KDX-I), 4천500t급 구축함, 1천800t급 잠수함 20여척이 참가했음.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한 F/A-18E/F(슈퍼호넷) 및 F/A-18A/C(호넷) 전폭기, 조기경보기 E-2C(호크아이 2000)와 한국군 F-15K, KF-16 전투기, 대잠 초계기(P3-C), 대잠 헬기(링스)를 포함한 200여대의 항공기를 비롯한 양국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8천여명도 훈련에 각각 참여했음. 한·미는 연합훈련을 연말까지 매달 실시할 계획임.
- 한편 훈련 사흘째인 27일에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F-22(랩터)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공대지 사격훈련과 대잠·대공·대함 사격훈련, 해상특수작전부대 훈련 등이 이뤄짐.



나. 한·중 관계

● 中 3대 함대 남중국해서 대규모 합동훈련(7/30)

- 중국 인민해방군(PLA) 해군 3대 함대가 한미 연합훈련이 이뤄지던 지난 26일 남중국해에서 주력 구축함들을 동원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음.
- 인민해방군 해군 북해, 동해, 남해 등 3대 함대의 주력 구축함들이 26일 남중국해에서 합동으로 대규모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문화보(文匯報),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 홍콩의 신문들이 30일 중국 관영 중앙(CC)TV와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음. 중국 3대함대의 합동훈련은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우성리(吳勝利) 해군사령관 등 인민해방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음.
- CCTV와 중국 국방부 웹사이트는 3대 함대의 합동훈련 목적과 훈련이 진행된 지점, 훈련에 참가한 군함과 병력의 규모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그러나 CCTV가 중국 3대 함대의 남중국해상에서의 합동 실탄 사격훈련 소식을 전하면서 루양급 구축함, 소브르메니급 구축함, 유도 미사일 탑재 프리깃함들이 합동으로 기동하는 장면과 함대공,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방영한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 3대 함대 구축함들의 합동훈련이 대규모로 이뤄졌을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음.
- 중국의 국내외 군사전문가들은 중국 3대 함대의 합동훈련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25~28일) 중에 실시된데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천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우 해군사령관이 직접 훈련을 감독한 점으로 미뤄 한미연합훈련의 대응용으로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아울러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의 남중국해 발언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임.
- 클린턴 장관은 ARF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에서 국제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미국은 남중국해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했음. 중국 인민해방군 3대 함대의 남중국해 합동훈련에 대해 영국 런던에 위치한 국제전략연구소의 게리 리 연구원은 CCTV의 화면을 분석해 볼 때 이번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수많은 미사일 발사훈련이 이뤄진 것을 추정된다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 같다"고 말했음.
- 게리 연구원은 중국 중앙군사위 위원과 수많은 고위급 장성들이 해군의 군사훈련에 직접 참가한 것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민해방군 장성 출신인 쉬광위(徐光裕) 중국 군축통제협회 이사는 3대 함대는 인민해방군 건군 기념일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훈련



을 해오고 있다면서 “그러나 3대 함대가 합동훈련을 한 것은 큰 공통의 임무를 수행할 전략적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근 열흘 사이 서해 또는 서해 부근 내륙에서 3차례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는 명백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콩 신문들이 28일 보도한 바 있음.

● 中언론 “서해부근 2곳서 군사훈련”(7/29)

-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던 시기에 서해 부근 내륙에서 두차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9일 보도했음. 이 신문은 신화통신을 인용해 인민해방군 지난(濟南)군구가 27일 산둥(山東)성내 서해에 접한 도시에서 전투부대와 각종 무기들을 동원한 가운데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음. 이 신문은 또 인민해방군 난징(南京)군구가 서해 부근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하는 훈련 모습이 27일 관영(CC)TV에 방영됐다고 전했다.
- 난징군구의 장거리 로켓포 발사훈련은 25일 이뤄졌으며 사실상 사상 최대규모였다고 차이나데일리는 확인했음. 이 신문은 그러나 지난군구와 난징군구의 구체적인 군사훈련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음. 차이나데일리는 아울러 한미 양국의 언론매체를 인용해 동해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5일 시작돼 28일 종료됐으며 양국간 군사훈련이 연말까지 매달 한차례씩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음.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 당국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음.

● <연합시론> 우리가 中관광객에 관심을 쏟는 이유(7/28)

-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길이 크게 넓어졌음. 정부는 세계 여행업계의 ‘큰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중국의 중산층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함. 13억 중국인들을 겨냥한 획기적인 조치로 중국인의 한국 방문 러시를 부추길 것으로 보임. 개선안 내용을 보면 복수비자는 중국의 500대 기업 임직원, 초중고교 교사, 변호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우수 대학 졸업자 등이 대상이고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중산층 이상이면 누구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또 일정기간 내에 두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도 신설함.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월수입이 6천위안(한화 약 106만원)이상 되는 중국 중산층은 전체 인구의 23%인 3억여명에 이르고 10년 뒤인 2020년에는 무려 7억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함. 숫자상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해외관광 수요인 셈임.



- 중국인들의 해외관광 수요는 상상을 초월함. 과거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국민들의 제한적인 소비 수준으로 해외관광은 극히 일부 계층에서만 이뤄졌음. 그러나 시장 개방이후 높은 경제 성장과 함께 중국인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외로도 점차 눈을 돌려 해외여행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유엔 산하 세계관광기구 통계를 보면 작년 한해동안의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4천765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나 맞먹음. 2015년에는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이 연간 8천 300여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음. 뿐만아니라 작년 한해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해외에서 뿌린 돈은 437억달러로 독일,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4위에 올라 있음. 이 같은 여행경비는 전년보다 21%가 늘어난 수준임. 중국인 1인당 씀씀이도 다른 나라 국민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큼.
- 조사결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쓰는 비용은 평균 1천670달러이지만 중국인들은 2천203달러로 32%가 많다고 함. 그래서 세계 각국 관광업계의 관심이 중국인들에게 온통 쏠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님.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와 일본이 중국의 해외관광 수요를 끌어 들이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임.
- 우리는 이젠 이런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해 대문을 활짝 열었음.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비자발급 때문에 중국인들이 그동안 가졌던 불평은 모두 없어질 것으로 보임. 당연히 중국인의 한국 방문도 크게 늘 것임. 그래서 정부는 134만명에 불과한 연평균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까지 300만명으로 끌어 올릴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함.
- 그러나 문을 여는 것만으로 다 끝났다는 생각을 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움. 관광객이 가능한 오래 머물고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그 만큼 얻는 것도 많아짐. 그래서 관광·항공업계와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의 공조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임. 중저가 호텔 공급과 항공노선 확대, 중국어 가이드 양성, 선호 쇼핑상품 개발 등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관광인프라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 일본은 우리보다 한달 앞서 비자발급 완화책을 쓰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사실상 지리적으로 같은 조건인 두 나라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상태에 들어갔다고 봐야 함. 한국 관광을 경험한 중국인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범 국가차원의 대처가 더더욱 절실하게 됐다.

다. 한·일 관계

● 日 근로정신대 후생연금 99엔 재심사 청구 기각(8/1)

-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지급 결정에 대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심사 청구가 기각됐음. 1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



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아이치현 사회보험사무소는 지난달 27일 근로정신대 할머니 7명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음. 시민모임은 근로정신대를 돕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공동변호단'과 협의, 재심사 청구·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 동원한 한국의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유족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인당 99엔(1천 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이들을 돕는 일본의 시민단체는 재심사를 청구했음.
- 시민모임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규정상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생각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있다"며 "최근 미쓰비시와 사죄와 보상 문제 등과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음. 시민모임은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임.

● 日 총리 "한국병합 100년 담화 신중 검토"(7/31)

- 일본 정부가 한국 강제병합 100년에 즈음해 총리 담화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음.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30일 임시국회 소집에 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리 담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예년에는 8월15일 종전 기념일에도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도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담화 발표 의사를 확인했음.
- 앞서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총리 담화의 발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간 총리가 같은 의사를 확인한 것임. 다만 발표 시기는 8월15일이 될지 아니면 강제병합 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표일인 29일이 될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발표 시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 박선영, '日 사할린 한인학살' 유엔 조사촉구(7/30)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0일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발생한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해 유엔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음.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1945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헌병과 경찰이 사할린 가미시스카에서 남성 19명을, 미즈호에서 임신부, 어린아이를 포함해 27명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며 "이는 명백한 제노사이드(대량학살) 협약 위반이므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음.
- 결의안은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인 처벌과 피해보상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관련 당사국들과의 외교협상 및 조사를 통해 일본이 거부하고 있는 보상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돼있음. 아울러 박 의원은 일제시대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에게 일본이 임금을 보상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관련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음.

● 日관방장관 “한국 8월의 의미 잘안다”(7/29)

- 권철현 주일대사는 29일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음.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권 대사는 이날 오전 센고쿠 관방장관을 인사차 방문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일본의 협조에 사의를 표시하고 8월이 한일 외교에서 민감한 시기인만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말했음.
- 이에 대해 센고쿠 관방장관은 한국에서 8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음. 센고쿠 장관은 과거 사할린 한국인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가졌던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시했음. 센고쿠 장관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유대 강화가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센고쿠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강제합병 100년을 맞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명의의 담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또 28일 기자회견에서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2010년도 방위백서의 발표를 9월 이후로 연기한 것과 관련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연대 강화가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모든 정책과제를 판단한다”면서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음.

● 韓日지식인 1천118명 “병합 원천 무효”(7/29)

- 한일 양국 지식인 1천여명이 100년 전 한국 강제병합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총리에게 식민지 지배를 사과하는 담화를 발표하라고 요구했음.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등 양국 지식인들은 28일 오후 4시 도쿄 참의원(상원) 의원회관 지하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측 587명, 일본측 531명 등 1천118명이 한국 강제병합 조약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고 밝혔음. 지난 5월10일 양국 지식인 200여명이 서명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뒤 참가자가 5배 가까이 불어난 것임.
- 일본측 서명 인사들은 이날 회견에 앞서 아라이 사토시(荒井聰) 국가전략상과 민주당 국제국장을 만나 “(한국강제병합 공표 100년) 8월29일 총리의 식민지 지배 사과 담화를 발표해야 한다”는 요청서



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음. 이 교수는 회견에서 “양국 서명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는 것은 민족문제를 넘어서 아시아 지식인의 사명감이 발휘된 놀라운 성과”라며 “일본 역사학자들이 병합조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였다는 점을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한일 양국 지식인들은 서명 참가자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예정이며, 중국 지식인 200명이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필리핀 등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음. 와다 명예교수는 일본측 서명자가 주로 역사 연구자(228명)인데 대해 “한국측 서명에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지식인이 참가한 반면, 일본에서는 그동안 일한(한일) 관계와 일조(북일) 관계에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들이 서명에 참가했다”며 “이는 ‘병합조약이 무효일지는 몰라도, 병합 자체가 무효라고 하면 실제로 있었던 시대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더욱 다양한 이들이 참가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김영호 한국 유한대학 총장, 아라이 신이치 이바라키(茨城)대학 명예교수, 야마다 쇼지 릿쿄대 명예교수, 시미즈 스미코 전 참의원 의원 등이 참가했고, 일본측 서명에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일본측 위원장을 역임한 미타니 다이이치로(三谷太一郎) 위원장과 유명 추리소설가인 아카가와 치로(赤川次郎)씨 등이 참가했음.

● 日관방, ‘독도는 일본땅’ 입장 변화없다(7/28)

-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이 28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보도했음.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센고쿠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竹島)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 “우리 국가의 입장은 일관되고 있다.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독도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을 배려해 이달 30일 예정됐던 2010년판 방위백서의 발표를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최근의 상황을 추가로 기술할 부분이 있어 방위백서 공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 센고쿠 장관은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캐나다 주요국 정상회의에서의 논의,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자위대 참가 등 일본이 한국에 협력한 사례들을 들어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상의 중요한 일들을 방위백서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연대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모든 정책과제를 판단한다”고 말했다.
- 교도통신은 이에 대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8월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방위백서를 공표하는데 한국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일정한 배려를 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고 전했음. 센고쿠 장관은 방위백서의 발표 연기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의 허락을 얻어 총리관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음.

● 日 250곳에 한국 유출 문화재 소장(7/28)

-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 6만1천409점이 일본 국립박물관이나 대학, 사찰 등 250곳에 소장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한국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음. 한국에서 유출된 문화재가 해외에 10만7천857점이 흩어져 있다는 사실은 지난 1월 발표됐지만 이중 일본으로 건너간 6만1천여 점이 어디에 소장돼 있는지 목록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유출된 문화재는 일본 궁내청이나 도쿄·교토의 국립박물관, 국립공문서관 내각 문고, 도쿄대, 와세다대 등 국공립 대규모 시설 57곳과 도쿄의 사찰 조조지(増上寺)나 교토의 지온인(知恩院)같은 사찰 등 145곳에 흩어져 있고 개인 48명도 한반도에서 가져온 문화재를 소유 중임. 대다수는 서적류와 도자기 등이지만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경기 이천의 오층석탑 같은 탑이나 불상 등도 포함돼 있음.
- 앞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국과 문화재·문화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이 요구한 한반도 유출 문화재 4천479 품목 중 1천432품목을 돌려준 뒤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고, 개인 소유 문화재는 돌려주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하지만 일본 국·공유 문화재 중에서도 궁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실의궤처럼 한일 협정 당시에는 어디에 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해 반환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소재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환 논의가 다시 한 번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이 목록에 대해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 “해외 소장 문화재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이라며 “목록에 있는 문화재가 모두 ‘약탈’ 문화재이거나 일제 침략 이후에 반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환수 문제에 언급,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는 환수하고 적법 절차를 거친 문화재는 한국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삼는 것이 정부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 日 방위백서 발표 연기..독도논란 재연 우려(7/27)

-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2010년판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오는 30일에서 내달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27일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이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 발표 시점을 미루기로 한 것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한국강제병합 100년인 8월22일이나 공표 100년인 8월29일을 앞두고 내놓을 경우 한국과 외교 마찰을 부를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임.

- 일본은 2005년판 방위백서부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포함했고, 그때마다 한국과 마찰을 빚었음. 지난해 일본 방위백서에 담긴 독도 관련 표현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올해 방위백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애초 30일 내각회의에 방위백서 내용을 보고한 뒤 의결되는대로 곧바로 발표할 예정이었음.

라. 미·중 관계

● 中 “미국이 먼저 군사교류 환경 조성해야”(7/30)

- 중국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결정 이후 중단된 미·중간 군사교류와 관련, 군사교류를 위한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인 경연성(耿雁生) 대교(대령)는 30일 건군 83주년 기념일(8월1일)을 앞두고 인민해방군 베이징(北京)군구 공병단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면서 “양국 군사관계의 개선을 위해 미국이 양호한 환경(조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양국 군사관계의 발전을 중시하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말했음. 그의 발언은 미국 측이 먼저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중국은 양국 군사교류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어서 군사교류 재개는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음.
- 중국은 지난 1월 말 미국이 대만에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한 직후 양국간 군사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회사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음. 이런 가운데 미·중 양국은 최근 들어 남중국해를 놓고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이 이 지역 안정의 중심이라면서 이곳은 미국의 국가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양제츠 외교부장은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국제이슈화하려고 들지 말라고 미국에 경고했음.
- 경연성 대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는 중국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한 곳”이라면서 “이 문제를 국제적 이슈로 만드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경 대교는 “중국은 이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스타인버그 “中, 한미훈련 의도 오해”(7/29)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7일(미국시간) 한미 연합훈련의 의도에 대해 중국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막는데 외교적 노력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닉슨 센터’에서 행한 연설과 일문일답에서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한국시간으로 28일 끝난 한미 연합훈련은 천안함 침몰사고에 대응한 조치인 동시에 보다 더 일반론적으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역지력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의 의도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특히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우리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국제법의 테두리에서 언제, 어디서 훈련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라며 중국은 이 문제를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고 북한이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대북 추가 제재의 이행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우리는 행정부 권한 내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다른 나라들도 무언가 더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美, ‘北도발중단’ 中역할 기대(7/28)

- 미국은 27일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기대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 당시 열렸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간의 회담 결과와 관련, “북한 문제가 논의의 일부분이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이 좀 더 건설적이 되고 역내에 긴장을 조성하는 도발적 행동들을 중단할 수 있게 하도록 계속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美-中 군사갈등, 전방위로 확산>(7/26)

- 미국과 중국간 군사갈등이 한미 동·서해 합동군사훈련에 이어 남중국해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임. 우선 미국의 ‘공세’가 눈에 띈다. 미 행정부는 중국의 우려에 과념하지 않은 채 자국 항모인 조지 워싱턴호를 지난 25일 동해로 파견해 한국과 사상 최대의 연합훈련에 돌입했는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잇따라 중국을 자극하고 나섰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포럼(ARF) 연설에서 남중국해 영토분쟁 해결이 이 지역 안정의 중심이라고 발언했음. 이어 25일에는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롭게 항해하고 아시아의 공동수역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데 국가적인 이해를 갖고 있으며 남중국에서 국 제법을 존중한다”고 주장한 것.

- 석유수송로인 말라카 해협과 연결된 남중국해에 미국도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끼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임. 이에 중국의 기 세도 만만치 않음. 중국은 특히 클린턴 장관의 남중국해 발언에 포화 를 집중하고 있음.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외교부 웹사이트를 통해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국제이슈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음.
- 중국과 인접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사군도와 서사군도는 지역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 면서 여기에 미국이 끼지 말라고 주장을 편 것임. 양 부장은 그러면 서도 남중국해가 석유수송 해상항로여서 미국도 이해관계가 있다는 클린턴 장관의 주장은 외면했음. 미중 외교장관 간의 이런 설전 배경 에는 남중국해가 대만, 티베트와 더불어 자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 장하는 중국과 공해인 남중국해를 독점하려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인식 차이가 자리잡고 있음.
- 중국은 26일자 환구시보와 차이나데일리, 세계신문보 등 관영 영자 지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냈 음. 이들 매체는 사실과 머리기사를 통해 “최근 클린턴 장관의 남중 국해 발언은 관련 분쟁에 개입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남중국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음.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을 확대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중 재’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남중국해 인접국들에게 미 국의 개입을 허락해선 안되며 당사국간에 인내심을 갖고 대화로 영 유권 분쟁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문했음. 이런 가운데 중국은 한미 동- 서해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를 다소 조절하는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음.
- 한미 동해 군사훈련이 시작된 25일 중국 외교부는 정작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음. 군사훈련이 예고되면서 그간 중국 외교부가 여러차례 “외국 군함과 군용기가 황해(서해) 및 기타 중국 근해에 진입해 중 국의 안보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 고 주장해온 점을 두고 볼 때 다소 의외였다는 지적임.
- 아울러 중국의 관영언론도 이번 훈련이 34년만에 한미연합훈련사상 최대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조지 워싱턴호를 포함해 훈련에 참가하는 군함과 전투기 등 규모와 전력을 상세하게 소개했고 실제로는 중국 을 노린 훈련이라는 의구심도 드러냈지만 비난의 수위는 이전과 비 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았음. 특히 한미 훈련에 대해 ‘보복성전’ 등의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북한의 반응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주목을 받 았음.
- 이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남중국해까지 자국 동해안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미국과의 군사적 갈등과 관 련해 사안별로 핵심이익과 비(非) 핵심이익을 구분해 ‘힘 조절’에 들



어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다시말해 한미 동해 군사훈련의 경우 중국 영해가 아닌 동해에서 이뤄지는 만큼 과도한 대응을 피하되 이미 핵심이익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얘기임.

-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지난 21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이후 북한으로의 불법적인 자금 유입을 끊는 대북 금융제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중국이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 때처럼 그 유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대치를 가능하면 줄이면서 ‘관망’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일명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은행들이 12개국 은행 17곳에 모두 37개의 계좌를 열어 놓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개 계좌가 중국계 은행에 개설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中, 美 항모와 60년간의 악연>(7/26)

- 중국이 한·미 연합훈련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시사잡지가 중국과 미국 항공모함 간의 60년간의 질긴 악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발행하는 시사잡지 환구인물(環球人物)은 26일자 최신호에서 ‘미국 항모와의 교전 60년’이란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게재하면서 지난 60년간 중국과 미국 항모와의 갈등을 소개했음. 이 잡지는 지난 21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입항함으로써 연합훈련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면 평소에도 자주 있는 한미 연합훈련이 이번에 특히 중국인의 시선을 끄는 것은 미 항모가 당초 서해로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강력한 반대를 감안, 한·미가 훈련장소를 서해에서 동해로 바꾸긴 했지만 미 항모가 추가 연합훈련에서 서해로 진입할지에 대해 중국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잡지는 덧붙였다.
- 잡지는 이번 연합훈련으로 주목을 받은 미 항모와의 갈등이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음. 중국 성립 이래 강력한 항모 전단을 보유한 태평양 제7함대는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연해의 미국 군사기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임. 잡지는 역대 중국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구사해 왔다면서 우선 마오쩌둥(毛澤東)은 미국과 영리한 투쟁을 벌여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 마오는 1954년 대만 해방을 명분으로 대만 해협(金門)의 마쭈(馬祖)섬을 포격하는 강공작전을 구사하다 대약진 운동으로 국력이 소진됐던 1960년대 초반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만의 공격 기도를 외교적 노력과 국제 정세를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갔다고 잡지는 전했다. 1980년 당시 부총리 겸 중앙군사위 비서장이던 경바오(耿飚)는 미국을 방문, 미국 항공모함 키티호크호에 처음으로 올라타



미 항모의 위용을 몸소 체험함.

- 또 1987년 3월 하순 당시 84세이던 쑤진광(蕭顯光) 전 해군 사령관은 한 신문에 기고문을 게재해 중국도 항모를 건조해야 한다며 항모의 필요성을 역설했음. 잡지는 또 1994년 미 항모 키티호크가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과 맞닥뜨리면서 양국이 군사충돌의 위기를 맞았던 상황을 비롯해 그동안의 악연도 소개했음.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 한미 군사훈련의 목적은 겉으로는 북한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해양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음. 잡지는 “미 항모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우리는 미 항모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세계적인 해양대국을 원한다면 해상 군사력의 발전과 강화를 떠나서는 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음.

마. 미·일 관계

● 美 대사, 日 히로시마 피폭 행사 참석키로(7/29)

- 미국 정부가 내달 6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리는 원폭 희생자 위령제를 겸한 평화기념식에 존 루스 주일 미 대사를 정부 대표 자격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29일 보도했음. 필립 클로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새벽(한국시각) “루스 대사는 미 정부를 대표해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희생자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 출석한다”고 발표했음.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당사국인 미국이 정부 대표를 희생자 위령제에 보내기는 이번이 처음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라는 이상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클로리 차관보는 내달 9일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평화기념식에도 미 정부 대표가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히로시마 방문 계획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답변,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음. 히로시마시는 1998년부터 해마다 원폭 피폭일인 8월6일에 맞춰 열리는 기념식에 핵보유국들의 참석을 요청했음. 지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등이 참가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참석하지 않았음.
- 올해는 유엔 사무총장으로는 처음으로 반기문 총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미국 대표가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도 대표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59개국 대표를 훨씬 웃도는 최소한 69개국가. 기구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됨.

● 美 “주일미군기지 北위협대응 활용 확신”(7/28)

- 월레스 그렉슨 미국 국방부 아·태차관보는 27일 “(유사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음. 그렉슨 차관보는 이날 하



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들(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국 내 작전들을 지지하기 위한 (미일동맹) 조약의 모든 조항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잠수정을 북한이 국외로 판매할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무기판매를 추적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천안함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북한이 매우 위협한 이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 그는 천안함 사건으로 한·미·일 3국간의 안보분야 협력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한국과 일본간에 역사 문제들이 있지만, “한·미·일 3국간의 관계는 유례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막기 위한 미사일 방어조치와 관련, “견고한 미사일방어체제를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 일본과도 이 문제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일본과는 탄도미사일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 개발 등과 관련한 협력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과도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가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핵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아웅산테러 등을 열거하면서 “(천안함 사건은) 아시아의 많은 우방들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천안함 사건으로 한국에서 대잠수함 작전 등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일본에서도 유사한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바. 미·러 관계

● 美보고서 “러, 핵무기 감축협정 줄곧 위반”(7/28)

- 러시아가 지난 1991년 미국과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음. 27일(현지시각) 워싱턴 타임스 인터넷판은 전략무기감축협정 준수에 관한 국무부 보고서를 인용, 러시아가 이전에 이동 미사일 탄두 사찰을 방해하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군축협정 합동 이행·점검위원회(JCIC)가 제기했던 각종 문제가 지난 2009년 12월 협정 만료 시에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고 기술했다.
- 이 보고서는 미국 공화당이 군축협정 후속협정 비준 논의 과정에서 국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국무부는 지난 2005년에도 같은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군축협정 위반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음. 이 같은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군축협정 비준을 서두르고 있는 민주당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음. 상원 비준을 위해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



요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공화당이 비준에 반대할 수 있는 구실만 늘려준 셈이기 때문이다.

-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이란이 사하브 미사일 핵탄두 제조와 기폭장치, 폭발물 실험 등을 진행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제를 어긴 증거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음. 보고서는 또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이끄는 조직이 북한에 20개의 P-1원심분리기 등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쓰이는 기기를 제공했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최근 미얀마와 북한의 핵 협력설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음.

사. 중·일 관계

● 中·日, 동중국해 가스전 협상 재개(7/28)

- 중국과 일본이 27일 도쿄에서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의 닝푸쿠이(寧賦魁) 변경·해양사무사 사장(국장)과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번 협상에서 건설적이고 솔직하며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양측은 정부간 기존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번 회의는 2008년 6월 양국이 가스전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후 약 2년만에 열린 것으로 국장급 인사가 참가하는 첫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이번 국장급 회의는 양제츠(楊潔攄<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임.
- 이번 회의에서는 동중국해의 가스전인 룡징(龍井.일본명 아스나로<翺檜>) 주변 해역을 공동개발하고 중국이 단독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가스전에 일본기업이 출자해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는 두가지 사안이 논의됐지만 양국의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닝푸쿠이 사장은 회의가 끝난 뒤 “양국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솔직하고 실무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번 첫 협상이 향후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해 타협점을 찾기 위해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내비쳤음. 양국은 향후에도 가스전 개발 조건과 양국의 참여비율 등을 협의할 예정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결론 도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용성(周永生) 교수는 “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오키나와 해곡(海谷)까지가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고 일본은 양국 해안에서 같은 거리에 중간선을 긋는 방식으로 EEZ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주



장과 이익이 충돌하고 있어 의견일치에 도달하기까지는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다.

- 중국과 일본은 2008년 6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인 양국 중간선에 걸쳐 있는 룡징 주변 해역을 공동 개발하고 ▲중국이 단독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 가스전에 일본측도 출자하며 ▲나머지 가스전 주변 해역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중국은 그러나 춘샤오 가스전의 단독 개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은 이에 강력 반발함으로써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은 난항을 겪어 왔음.

● <日 신임 주중 대사, ‘튀는’ 발언 눈길>(7/27)

- 31일 부임을 앞둔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郎.71) 중국 주재 일본 대사가 지금까지 외교관들과는 발상부터 다른 발언으로 화제를 일으키고 있음. 니와 신임 대사는 이토추(伊藤忠)상사 사장과 회장을 지낸 민간인 출신 외교관임. 중국과 일본이 1972년 국교를 재개한 이래 민간인 출신이 주중 대사로 부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남은 수명을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할 수 있다면 개운하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대사 자리를 받아들였다는 니와씨의 발언에는 거침이 없음.
- 니와 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이전의 작은 중국이 아니고, 세계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국이 됐다”며 중국 지도부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발언이나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도전적으로 들리는 말을 했음. 지금까지 일본 대사들이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소극적인 행보를 한 것과는 180도 다른 태도였음.
- 거꾸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는 “대국인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말로 일본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건드렸음. ‘중국이 대국답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한 말이지만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이 27일자 조간 1면에 이 발언을 문제 삼는 기사를 실었을 정도로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음.
- 북한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발언을 했음. 그는 지난 23일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벌칙을 부과한다고 해서 정말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며 일본의 대북 제재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른 시일 안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싶다”고 대화 재개에 의욕을 보였음.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를 향해서도 색다른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음. 26일 강연에서 주중 대사관 직원들이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노래방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음. 주중 일본 공관 직원이 여성 문제로 발목이 잡힌 끝에 자살한 사건을 거론하며 강경 방침을 꺼내 든 것. 또 ‘차이나 스쿨’로 대표되는 전문가 외교 시대는 끝났다는 말도 했음. 부임 전부터 파격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니와



대사가 동북아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중일 관계에 어떤 바람을 불러 일으킬지 눈길이 쏠리고 있음.

● **中·日, 합선 교신용 무선 주파수 마련(7/26)**

- 중국과 일본 방위 당국이 26일 일본 방위성에서 과장급 실무 회의를 열고 비상시 양국 합선의 교신에 사용할 선박용 무선 주파수를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양국은 또 방위 당국간의 핫라인 설치도 서두르기로 하고 앞으로 어느 레벨의 핫라인을 개설할지 논의할 예정임. 중국과 일본 방위 당국간 실무 회의는 2008년 4월 베이징에서 열린 첫 협의 이래 2년 3개월 만에 개최됐음. 올해 안에 베이징에서 3차 실무 회의를 열 예정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지난 5월 방일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와 양국 방위 당국간 연락체제를 강화하고, 수뇌급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음.

아. 기 타

● **中외교부장 “세계권력 亞이동설 동의못해”(7/31)**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세계 권력의 무게중심이 서방에서 아시아(동방)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관영 신화통신은 양제츠 부장이 30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멕시코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음. 양 부장의 이런 입장에는 중국이 슈퍼파워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으로 올라섰다는 분석에 대해 중국 스스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와 맥락을 같이함.
- 그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 분석을 부정했지만 개발도상국의 발전 추세에 따라 세계의 다극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했음. 양 부장은 “현재 세계에서 나타나는 추세는 국제역량이 균형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세계의 다극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고 과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라고 말했음. 그는 “다극화 과정은 신흥 개발도상국의 빠른 발전과 개도국의 지역적 역량의 부단한 강화를 포함한다”면서 “이는 비단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음.
-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서의 개도국의 발언권이 강화돼 개도국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요한 국제문제는 소수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안 된다”면서 “개도국의 합리적인 주장과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했음. 양 부장은 “개도국들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평등한 발언권과 대표성 및 권



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양 부장은 이번 회견에 앞서 에스피노사 장관과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간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올 연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중국의 지원도 약속했다. 양 부장은 쿠바, 코스타리카도 방문하고 내달 4일 귀국함.

● **中언론 “서해부근 2곳서 군사훈련”(7/29)**

-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실시되던 시기에 서해 부근 내륙에서 두차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신화통신을 인용해 인민해방군 지난(濟南)군구가 27일 산둥(山東)성내 서해에 접한 도시에서 전투부대와 각종 무기들을 동원한 가운데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인민해방군 난징(南京)군구가 서해 부근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장거리 로켓포를 발사하는 훈련 모습이 27일 관영(CC)TV에 방영됐다고 전했다.
- 난징군구의 장거리 로켓포 발사훈련은 25일 이뤄졌으며 사실상 사상 최대규모였다고 차이나데일리는 확인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지난군구와 난징군구의 구체적인 군사훈련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다. 차이나데일리는 아울러 한미 양국의 언론매체를 인용해 동해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25일 시작돼 28일 종료됐으며 양국간 군사훈련이 연말까지 매달 한차례씩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그와 관련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중국 당국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